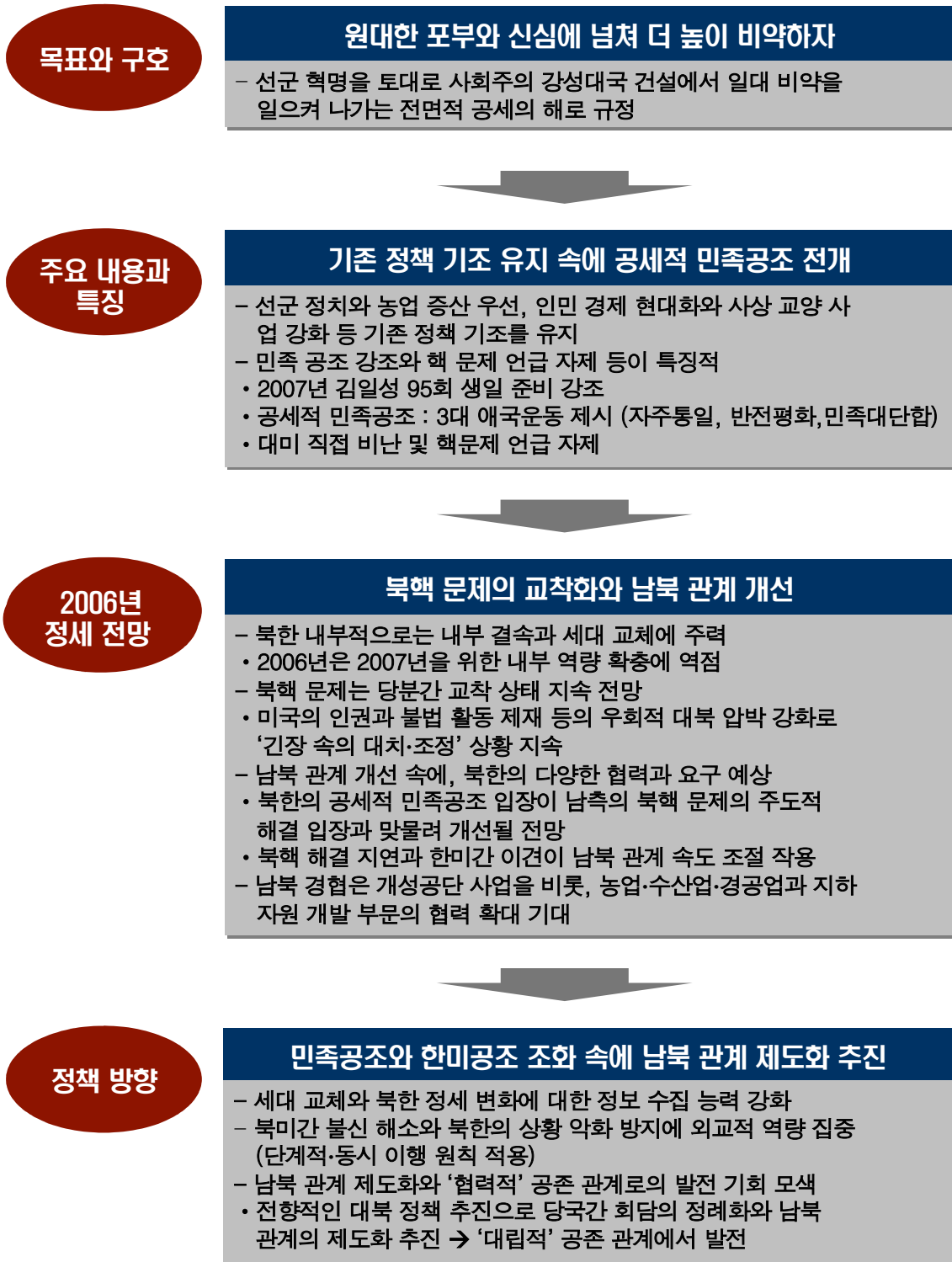


□ 인적 기반 남북 관계의 법·제도화를 촉진

- 2006년 북한 신년사의 시사점



1. 주 내용과 특징 : 새로운 정책 제시 없이 공세적 민족공조 강조

○ (개요)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,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과 경제 개선을, 대외 및 대남 관계에서는 실리 추구의 관계 개선을 강조함

- 대내적 : 선군 정치와 국방사업 강화, 농업 증산과 인민경제의 현대화 등을 통해 체제 안정과 내부 결속 강화, 경제 생존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둠
- 대외적 : 중국·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언급이나, 미군 철수와 미국의 대북 고립 책동에 대한 강경 대처 등 반미 투쟁을 강조하면서도 핵 문제 및 금융 제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
 -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극단적 대결보다는 미국의 정책 추이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관망적 태도와 대미 자극 자제의 표현으로 해석
- 대남 관계 : 6.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었던 2005년을 ‘조국 통일 운동사에 커다란 자욱을 남긴 해’로 평가하면서, ‘3대 애국 운동’을 통한 보다 공세적인 민족공조와 실리적 남북 관계 추구 입장을 표명함
 - 3대 애국 운동은 자주 통일(통일을 가로막는 미국 배격), 반전 평화(거족적인 미군 철수 투쟁 강화), 민족대단합(반보수 대연합을 통한 보수 세력의 결탁과 도전 분쇄)을 의미함

2. 부문별 주요 내용과 전망

○ (정치·군사 부문) 선군 정치와 사상 교양 강화, 국방 사업의 최우선 보장 등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안정과 결속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

- 정치 부문 : 2006년을 선군 혁명을 토대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로 규정하고,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 것을 투쟁 과업으로 선정함
 - 혁명 수뇌부의 수령 결사 옹위 신념 보유, 견실한 열혈 투사 양성 등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면서, 혁명의 3~4세대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 강화 등을 강조함

- 특히, 개혁·개방과 경제난으로 인한 외부 사조 유입과 주민들의 사상 이완을 경계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핸드폰 등의 통신 정보 통제, 미국과 EU의 인권 문제 제기 등에 따른 주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
 - 이는 ‘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’ 60주년(1. 17)과 ‘타도 제국주의 동맹’ 80주년(10. 17) 행사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
 - 한편, 지난해 후반부터 일부 지역에서 재 실시하고 있는 식량배급제와 종합 시장에서의 곡물 판매 금지 조치는 물가 안정과 함께, 사회 통제의 이중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
 - 2007년의 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핵 문제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이 일단락 되기 전까지는 권력 세습보다는 김일성-김정일 우상화를 통한 김정일 체제 강화에 더욱 치중할 것임을 예고함
 - 다만 ‘혁명의 3~4세대들을 일심단결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’는 문구를 지난 2년간의 장성택 숙청과 연결하면 김정일 부자에 대한 ‘代를 이은 충성’으로 해석하여 세대 교체가 임박했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존재
- **군사 부문** : 전군의 혁명화, 수령 결사, 훈련 제일주의, 국방공업의 최우선 보장 등을 강조함으로써 거세질 미국의 대북 압력에 대비할 것을 역설
 - ‘인민 군대는 자위적 국방력의 핵심이며 사회주의 기둥이고, 국방사업은 강성대국 건설의 제일 중대사’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선군 정치 우선 노선을 재확인함
 - 특히, 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’하고 ‘원썬들이 조국을 한 치라도 침범한다면 일격에 짓밟게 버릴 수 있도록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’면서 군의 전투 동원 태세를 독려함
- (경제 부문)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의 결정적 전환이란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 증산과 인민 경제의 현대화 등과 함께, 경제 관리 개선과 내각의 역할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임
- **농업 증산** : 2005년에 이어 ‘농업을 경제 건설의 주공 전선’으로 선정하여 먹는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·총동원하고, 특히 증산을 위해 기계화와 화학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강조

- **인민 경제의 현대화** : 전력·석탄·금속공업·철도 운수 등의 선행 부문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분야의 증산을 위해 인민 경제의 개진 현대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함

- **경제 개혁 지속** : 내각의 통일적 지휘 하에 인민 경제 생산의 전문화와 표준화를 실현하며, 경제 일군들의 과학적 경영 전략과 기업 전략을 강조함으로써 내각 및 경제 관료 중심의 경제 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임

○ (대남 부문) 3대 애국운동 제시와 6.15의 '우리 민족끼리의 날' 지정 등 보다 공세적인 민족공조 입장을 보임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이 기대됨

- **공세적 민족공조** : 조국 통일운동 구호를 2005년의 '3대 공조'에서 '3대 애국운동'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협조와 주장·요구가 있을 것임을 시사

· 이는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분리 접근 자세, 지난해 말 17차 장관급회담에서의 제안한 정치·군사·경제 분야의 3대 장벽 제거 요구 등과 함께, 특히 민족대단합은 남한의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

· '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아야 할 것'이라는 신년사에 이어, 남북장관급회담의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도 노동신문 기고(1.5)에서 '올해 조국 통일 투쟁에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 것'이라고 하였음

· 3대 공조는 민족 자주 공조(한미일 공조 폐기)와 반전 평화 공조(미국 철수와 핵 문제 해결에의 협력), 통일 애국 공조(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남북 경협 확대)를 의미함

○ (대외 부문) 대미 투쟁 강조 속에서도 핵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'자주·평화·친선'의 기본 외교 노선을 단순 되풀이함으로써, 상황 악화보다는 기존의 대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

- **대미 직접 비난과 핵 언급 회피** : 중국·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나 대미 직접 비난과 핵 문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,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대북 정책 추이를 관망하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임

· 이는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극단적 대결이나 불법 행동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고립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된 듯함

3. 2006년 북핵 및 남북 관계 전망과 과제

○ (전망) 북핵 문제의 해결 지연 속에, 북측의 공세적인 민족공조와 남북 경협이 여건 개선으로 남북 관계와 경협은 일정한 진전이 기대됨

- 북핵 문제 : 뚜렷한 묘책이 없는 핵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인권과 불법 활동 제재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것임
 - 북핵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실패와 공화당 의원들의 스캔들, 11월 중간선거 등의 국내 문제를 비롯하여, 이라크 사태 악화와 샤론 총리 뇌출혈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부시 정부에게는 후순위로 판단
 - 다만 북미는 물론, 6자회담 참가국들은 상황 악화나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므로,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면서 어느 일방이 회담의 틀을 깨는 극단적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
 - 따라서 북핵 및 북미 관계는 종전과 같이 상호 비난과 경고를 주고받는 '긴장 속의 대치·조정'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며, 한미간에는 미국의 우회적 압박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로 다소 갈등이 노출될 수 있음
- 남북 관계 : 북측의 '우리 민족끼리' 강조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문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라는 남측 입장이 맞물려 개선될 전망
 - 경색된 북미 관계와 불법 활동 제재에 따른 경제의 안전판이 필요한 만큼, 북한으로서는 2007년의 김일성 95회(김정일 65회) 생일행사와 대선에서의 보수정부 출범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 관계의 일정한 진전이 필요할 것임
 - 다만 북핵 해결 지연과 한미간 이견, 정치·군사 분야의 합의 도출 지체는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의 남북 관계 진전에 속도 조절 역할을 할 것임
- 남북 경협 :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화와 남북경협 사무소 개소, 백두산 및 개성 등지로의 관광 지구 확대, 북한의 대남경제협력법 제정, 체면주의 타파와 유무상통의 경협 추진 합의 등으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
 - 특히 북측의 농업 부문 기계화와 화학화 지원 요구로 농기계와 비료 지원이 늘어나고, 협력 부문도 경공업과 농림수산업, 지하자원 개발 부문으로 확대될 전망

○ (과제) 북한 정세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 확충과 함께, 북측의 공세적 민족공조 주장을 남북 관계 제도화와 협력적 공존 관계로의 발전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

- 정세 분석 능력 강화 : 북한 정세 변화와 권력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 확충과 함께, 대북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
 - 북한은 내부적으로 2006년보다는 김주석 95회(김 위원장 65회) 생일행사와 김 위원장의 당 총비서 취임 10주년 등의 2007년 행사에 대비하여 내부 역량 확충과 세대 교체 및 신진 관료 등용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
- 북핵 해결의 적극적 역할 :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 속에, 단계적·동시 이행 원칙을 통한 북미간의 불신 해소와 신뢰 형성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
 - 이를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공조 하에, 남북 당국간 회담과 한중 고위급 접촉 등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북미 양측을 설득하여 상호 불신의 갭을 축소시켜나가고,
 -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 추진이 요구됨
- 남북 관계 제도화 : 북측의 공세적 민족공조 주장을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와 남북 관계 제도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
 -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4대 경협합의서를 비롯한 기존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과 3통 보장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
 - 또한,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 중심의 남북 교류 협력이 정치·군사 부문으로 확대 발전되도록 유도(경제와 정치·군사 협력의 병행 추진)함으로써, 현재의 '대립적' 공존 관계를 '협력적' 공존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
 - * 대립적 공존 관계란 경제 및 사회 문화적으로는 제한적인 교류·협력이 이루어지나, 정치·군사 및 이념적으로는 대립 구도가 지속되는 상태로 '대립 속의 협력' 구도 상황임. 반면, 협력적 공존 관계란 경제·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전면적 교류 협력과 더불어 정치·군사 측면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단계로,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단계임HRI

홍순직 수석연구위원(3669-4182, sjhong@hri.co.kr)